

민주주의 위기와 노회찬의 민주주의

: 오늘날 다시 보는 노회찬의 민주주의 사상¹⁾

강 승

서론

오늘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감각은 낯설지 않다. 가깝게 지난 2024년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친위쿠데타를 일으켰고, ‘반공’과 ‘부정선거론’은 계속해서 살아남아 한국 사회에 출몰하고 있다. 미국에서 의사당 난입을 선동했던 트럼프는 다시 당선되어 백악관에 돌아왔고, 이민자 강경 탄압을 시도하고 멋대로 무리한 전쟁을 일으켰으며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을 민주주의의 양상이나 제도에 있어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들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유럽 곳곳에서는 반이민을 내세운 극우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거나 권력을 쥐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해 세계 전반에서 ‘독재화의 물결’(Lührmann & Lindberg 2019)이라고 불릴 만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둡게 스케치했지만, 실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의하기 까다롭다는 점과 함께 모종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의미란 단일하지 않고 상호 경합적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위기’란 그 발화자가 무엇을 민주주의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엇이 위협받고 있는지를 둘러싼 언어적 투쟁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의 일상적 작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일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의 일상적 작동에 다름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발화한다는 것은 일종의 위기화의 언어를 수행하는 것과 같으며, 여기서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인가는 늘 관건이 된다(강승 2023).

그런데 이 특징이야말로 노회찬의 말과 글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에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는데 있어 특유한 장점이 될 수 있다. 노회찬은 ‘진보정당’이라는 그간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드러나지 않던 정치 세력을 새롭게 기입시키고, 또 그 집권을 향해 사회를 설득해 나가던 대표적 주자였다. 노회찬은 위와 같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당원들과 대중들에게 민주주의를 기존과 다르게 형상화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 날카롭게 위기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노회찬의 글과 말은 (한국)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현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생한 가능성의 언어이기도 하다. 그의 정치적 언어들은 그가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일반을 어떻게 그려냈으며, 또한 다시 그려내고 싶었는지와 긴밀히 연결된다. 예컨대 1987년의 제6공화국의 한계를 넘어선 ‘제7공화국’, 노동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1) 이 글은 노회찬 8주기 추모 심포지엄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도움을 주신 정보연, 정유현, 이연재, 하승우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가 기존의 민주주의를 문제화하고 위기화하며 또 대안을 제시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과 글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맹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깊이 연결된다. 그리고 모종의 까닭들에 의해 그에 관해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거나 복합적인 위기에 더해 심화되었을 수 있다고도 추론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민주주의, 또는 한국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위기라고 진단하는 대상들이 한편으로 그가 문제화했던 현실들의 유산이거나 또는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해 이 글에서는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구성하는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고, 거꾸로 노회찬의 민주주의 사상 즉 ‘노회찬의 민주주의’가 그러한 상황들을 진단하고 대처해나가는데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 재구성해본다. 그가 지적했던 것 중 어떤 것은 개선되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 쉬지 않고 휘몰아친 극적인 사건들 이후에도, 어떤 문제는 온존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되며 위기의 조건을 재생산해내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한 민주주의 위기의 양상은 어떻게 제시해 볼 수 있을까? 오늘날 주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위기화의 언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파의 극우화이다. 인종주의나 반이민 그리고 부정선거론 등을 위시한 우파의 전술과 담론은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 또한 예외는 아니다. 둘째, 점증하는 불평등이다. 세계화와 이에 따른 산업의 고도화는, 특히 많은 산업 선진국에서 불평등의 증대나 사회적 박탈을 가져오고 있다. 셋째, 진보의 위기이다. 기존의 진보정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은 이러한 현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지지세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이 세 현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때로는 깊숙하게 연관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각각의 상황을 개괄하고, 노회찬의 말과 글이 각각의 위기를 대처해나가는데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정치 ‘판갈기’: 우파의 극우화에 대항해

윤석열의 12.3 친위쿠데타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국회를 폐쇄하려고 할 수 있다는 발상과 시도뿐 아니라, 이후에 벌어진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입장과 대대적인 탄핵 반대 및 계엄령 옹호 시위는 그간 공고화되었다고 여겨졌던 한국 민주주의에 균열을 내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지지자들에 의해 부정선거론과 반공-협중 담론을 비롯한 음모론들이 부상했으며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실제 폭동이 발생했고, 이는 극우적 담론과 행태들이 수면 위로 거대하게 떠오른 모양이 되었다. 다행히도 시민들과 야당 그리고 일부 여당의 즉각적이고 강렬하며, 대규모의 끈질긴 저항은 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윤석열과 친위쿠데타를 탄생시켰는지, 그리고 이 글이 처음 작성된 2026년 6월에도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창궐하는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 사회가 극우화된 우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중대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극우의 부상은 비단 한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지구적인 음모론적 대안 우파의 부상과 궤를 같이한다. 예컨대 미국의 부정선거론 세력과 한국의 부정선거론 세력과의 교류는 여러 번 언론 등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지적 중 하나는 극우의 부상과 심화가 기존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신진옥은 한국 민주주의를 권위주의화와 재민주화의 ‘진자 운동’에 비유한 바 있다(신진옥 2018). 그리고 이와 같은 진자 운동이 벌어지는 주요한 까닭으로 그는 한국이 군부 권위주의 시기를 겪으며 남게 된 ‘포스트-권위주의적’ 유산들과, 세계화 등에 따른 불평등 심화의 ‘포스트-민주주의적’ 문제들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을 든다. 이것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극우파가 군사 쿠데타 시도에 대한 정당화뿐 아니라 반공주의를 다시 동원하는 데서 전자의 문제를, 사회 전반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같은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는 것에서 후자의 문제를 계속해서 마주한다고 볼 수 있다. 신진옥은 비정규직 증가와 함께 노무현 정부가 소득과 자산 지니계수의 악화를 가져왔던 측면을 강조하며, 불평등이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침식시킨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낸다.

이처럼 극우가 진공 상태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역사적 기원에 맞물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맞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극우화의 문제가 쉽게 정치적 무대에서 퇴장하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한다. 한국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극우에 상당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실제로 극우화된 정당의 면모들을 보여줬다는 점은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보여준다(신진옥 외 2025, 63). 국민의힘은 계엄 당시 반대에 앞장서기도 했던 한동훈을 축출했을 뿐 아니라, ‘탄핵 찬성 보수’와 ‘탄핵 반대 보수’가 한 정당 안에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당대표가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는 등 우려스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근래 정당들이 극단적인 후보를 걸러내는 게이트키퍼 능력이 상실하고 있는 상황(레비츠키 외 2018)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사태들이 윤석열 후보의 탄생과도 구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당 체제에서는 다른 제3의 대안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실수나 불만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이르러서는 쉽게 반대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집권하고 있다고 해도, 만약 앞서 언급된 사회경제적 문제 등에 따른 불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극우화의 조짐을 보이는 정당의 인기 있는 후보를 마주하는 시나리오 또한 그려보기 어렵지 않다. ‘반공’의 유산과 ‘협중’의 부상이 공명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는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 윤석열의 사례 및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집권 보수 정당이 극우에 포획되는 사태 또한 다시 상상해 볼 수 있다.

관련해 노회찬의 2010년 언급은 다시 되짚어볼 가치가 있다.

“시지프스와 같은 노력을 국민들에게 언제까지 반복하라고 강요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힘들게 바위 올려 놓고 또 굴러 떨어지고.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당장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물리치더라도 다음에는 더 빈번히 한나라당이 복귀할 근거를 만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노회찬 외 2010,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제안,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제안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현 선거 제도의 뼈대를 이루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와 결선 투표 없는 대통령제의 결합은 이와 같은 취약성을 더욱 강화하는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비례대표 정원이 적거나 위성정당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화된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에게 사표 방지를 위해 두 개의 거대정당으로의 표 쏠림을 강요하게 된다. 이때 극우가 한 정당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고 심지어 핵심적 당원층을 차지하고 있다면, 국회의원 후보나 대통령 후보에 있어 해당 정당의 후보가 이들을 동원하지 않고 승리하기란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리고 극우적 성향을 가진 후보나 집단이 상대 진영에 대한 정치적 불만에 힘입어 집권에 성공한 경우, 차기 선거 전까지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값비싸고 오래 걸리는 거리의 견제 이외에는 민주적 통제의 방법이 거의 없게 된다. 정리하자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극우적 입장은 언제나 대두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이에 포획된 정당과 후보가 집권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회찬은 무엇보다 이 문제가 정당과 정치인들이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하에서 두 당이 영남과 호남의 패권을 바탕으로 국회 의석의 95%가량을 과점하고 있는 양당 중심체제”(노회찬 외 2014, 22)를 그가 앞장 서서 비판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체제가 지역주의에 기반한 투표가 아닌 다른 사회경제적 정체성에 기반한 투표, 예컨대 “계급투표 성향의 유권자 지지를 사표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다(진보정당추진위 1999, 11). 다시 말해 그에게 비례대표제인가 단순다수대표제인가의 문제는 시민들이 지역의 대표자를 뽑을 것인가, 사회경제적 대표자를 선택할 것인가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의 성격은 무릇 선출된 정치인들의 방향성 - 그들이 지역을 대표할 것인가, 사회경제적 의제를 대표할 것인가 - 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간주한다. 사회경제적 의제를 대표하며 불평등을 방지하고 개선하는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당선과 추진력, 그것이 진정으로 ‘판’을 가는 것이고, 선거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어쩌면 더욱 근본적으로 극우의 집권을 막는 일이라고 우리는 노회찬을 따라 추론해 볼 수 있다.²⁾

다만 보다 비례적인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극우를 전면화하는 독립적인 정당의 부상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일례로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경우 2025년 총선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지역 유권자 투표에서는 42

2) 특히 다음과 같은 노회찬의 언급은 극우에 맞서는 전선 또는 ‘진보적’ 포퓰리즘 전선을 구성해 나감에 있어 그 실질적 내용들을 무엇으로 채워낼지에 대한 중요한 고민을 던져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판하게 되면 저는 또 다시 2007년 꼴이 난다고 봅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 시급한 해결과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보니, 민주주의를 애기한 사람이 10% 정도고, 경제성장이 70% 넘는 걸로 나왔어요. 당시에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포만감이 꽤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지금도 경제문제가 심각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저들이 미디어법 강행을 포함해서 모든 걸 망쳐왔다는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민심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반MB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MB의 실질적 내용의 중심 맥락을 잡는 데 있어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한 연대이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노회찬 외 2010, 221. 강조는 필자).

석을 얻었지만, 정당투표로 인한 비례 의석으로 인해 110석을 얻어 총 152석으로 기민당에 이어 원내 2당이 되었다. 이후 구성된 내각에서 기민당은 사민당과 대연정을 이루며 극우 집권을 방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례들은 선거제도가 개편된 이후에도 극우 정당의 부상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상당한 지지를 확보한 스웨덴(비례대표제)의 ‘민주당’과 집권에 성공한 이탈리아(다소 높은 비례대표 비율과 소선거구제와의 결합)의 ‘이탈리아의 형제들’의 사례는 극우 정당이 부상 이후에도 연정을 비롯한 기존 정치 세력과의 동학 속에서 대적으로 ‘온건화’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보여준다(Berman 2022). 반면 임기의 보장이라는 제도적 경직성을 가지기에 탄핵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권력을 잃지 않는 대통령제의 경우, 당선 후에는 이와 같은 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신중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2) 사민주의: 점증하는 불평등에 대항해

노회찬은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를 87년 6월 항쟁과 7-9월의 노동자 대투쟁의 분리로 바라본다(노회찬 외 2010, 405-406). 앞선 투쟁을 이끈 이들은 제도권 정치로 흡수되었으며 직선제 개헌을 이뤄내고 권위주의적 정치 체도를 개혁했으며 결과적으로 권력을 쥐게 된 세력이 되었지만, 이들이 또한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세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분리되어, 전자는 실현되었지만 후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부록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제7공화국> 참고).

점증하는 불평등과 이에 대한 불만은 지구적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이자 때로는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우파 포퓰리즘의 반이민 및 외국인 배척은 산업의 역외화와 고용 상실, 지역 낙후 등으로 인한 박탈감을 그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선진국의 부를 책임 지는 고생산성 산업들로의 산업적 전환과 투자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 등에 따라 충분한 수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Rodrik 2023). 예컨대 소수의 다국적 기업과 관련 투자자 및 임직원에게는 막대한 부가 집중되지만, 그 밖의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일자리의 몫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그것이다.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이중구조(dualism)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를 포퓰리즘의 중대한 배경에 대한 전반적 설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관련한 노회찬의 언급도 흥미로운데, 수출 대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던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1% 성장에 30만 개 일자리가 생겼지만, 지금은 4% 성장에도 32만 개에 불과하다면서 양질의 다른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노회찬 외 2014, 236).

앞서 노회찬의 생전 시기 비정규직화와 불평등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오늘날에도 불평등 문제가 뚜렷한 개선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

는 비중이 외환위기 전후로 크게 늘어난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었고 이러한 양상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World Inequality Database).³⁾ 최근의 일례로 2026년 1분기와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 2024년 1분기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을 비교해 보면, 소득 불평등이 개선 보다는 악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024년 1분기의 경우 1~3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5분위의 소득은 다소 감소하며 불평등이 다소 개선되는 양상이었던 반면, 2026년 1분기의 경우 5분위 소득만 큰 폭으로 증가하고 특히 1~2분위의 경우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 가계의 적자폭이 심화된 모습이었다(통계청 2024; 국가데이터처 2026).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값 상승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 역시 심화되어 왔을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불평등과 분배의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나 국회를 비롯한 정치적인 공간들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노회찬이 말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부재이자, 그가 ‘사민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웠던 까닭이었다. 그것은 불평등을 문제시하고, 대안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담론이나 조직 그리고 정치의 부재와 그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는 예컨대 노동조합에 있어서도 그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뿐 아니라, 조직의 형태와 정치적 대표 양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전반적인 평등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노동문제에 있어 ‘산별노조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황, “직장을 넘어선 계급적 단결이 없”는 상황(노회찬 외 2014, 88-89)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을 가한다.

“한국 진보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문제에 있다. 진보세력이 정치적으로 세력화되는 데 가장 큰 대중적 기반은 노동자 계층인데, 우리는 노동운동을 대중화하는 데 실패했다. 민주노조운동의 초기 노선이었던 전투적 조합주의가 결과적으로 전투력 있는 조합만 살아남게 만들면서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흘러갔던 탓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 반면 우리나라의 투쟁할 힘이 있는 노동조합원들은 복지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결된 사람들이다. (...) 우리 사회 전반이 도달해야 할 복지 수준보다 더 높게 누리고 있으니 임금이나 더 올려달라는 요구만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이들의 운동에 주목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진다.”(노회찬 외 2014, 206)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서 언급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더불어, 최근 반도체 성과급 논쟁에 있어 단기적으로 제대로 된 사회적 토론과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현상과도 겹쳐볼 수 있다. 세계화된 자본주의에서 지구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이는 ‘슈퍼스타’ 기업의 이익 배분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하는데, 역설적으로 슈퍼스타 기업들에서의 개별 성과급 협상이 ‘성공적’일수록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회찬이 제7공화국을 제안하며 그가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강조한 부분을 참조해 볼 수 있다. 그는 제7공화국 개헌을 통해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실질화하겠다고 역설하면서도 동시에 세계화로 인해 기업별로 이익의 격차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정 기업에 있는

3)

https://wid.world/share/#0/countrytimeseries/sfiinc_p90p100_z:sfiinc_p99p100_z/KR/2015/eu/k/p/yearly/s/false/5.286/50/curve/false/1996/2012

특정 노동자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초기업적으로 합리적으로 균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설한다(노회찬아카이브 2007). 이와 같은 구상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 발전과 재편의 과실이 어떻게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질문들은, 특히 최근 AI 관련 산업 전환의 시대의 맥락에서 더욱 의미 있는 과제를 던져준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에 있어, 사민주의적 특성의 국가들이 주로 공유하는 특징인 산별 협상을 통한 임금 격차 억제와 적극적인 노동시장 재교육 등 조정된 시장 경제(CME)적 특징이 그 부작용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좋은 전례를 제공해준다(아제모글루 & 존슨 2023; Baccini et al. 2022).

이와 관련되어 개헌의 정치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그간 여러 번 개헌 논의가 이어졌지만, 대통령 연임 여부와 같은 쟁점에만 주로 매몰되어왔다. 반면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권리와 국가적 환경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고 토론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반면 노회찬은 2007년 제7공화국을 주장하며 교육, 의료, 주택의 공공화를 내세우기도 했으며, 2018년 박근혜 탄핵 이후 그가 속한 정의당에서 전면 개헌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비록 사회적으로 활발한 토론을 발생시키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개헌의 정치가 사회경제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힘에 대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낙태죄를 폐지하는 문제나(아이슬란드) 동성혼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아일랜드)하는 헌법 개정 등에 대해 시민의회를 활용한 사례는 개헌의 정치가 시민의회와 같은 제도적 기제와 적절히 맞물렸을 때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평등의 보장을 향해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 가능성을 전제로 한 헌법 개정 논의는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가 수동적 시민으로 머무르거나 상대 당파 정치인들에 대한 증오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공동체적 사안을 심의하고 토론하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종류의 시민상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 또한 가진다.

이에 더해 노회찬에게 사민주의란 정치적 제도나 경제적 제도뿐 아니라 일종의 문화이자 역사적 축적이기도 했다. 그는 북유럽이 영국과 달리 “정치제도뿐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도 사민주의적이다”라는 것을 느꼈다며, 그 까닭을 북유럽 사민주의 정당의 오랜 집권 기간에서 찾는다(노회찬 외 2014, 391-392). 다시 말해 그에게 사민주의란 우리가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서로 보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자,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추구할 만한 공통의 경험이었던 것이다.

(3) 진보의 세속화: 진보의 위기에 대해

민주주의 위기의 또 다른 측면은 ‘진보의 위기’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다. 이것은 외적으로는 기성 중도좌파 정당의 쇠락이나(이를 테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경우), 진보정당의 세력 약화(한국의 경우)로 대표적으로 표현되는데, 보다 심층적으로는 사회운동에 있어서 우파 운동의 동원력

강화 및 진보적 관점과 대안의 주도권 상실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조합 조직률의 미비나 쇠퇴 및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증대와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 요컨대 사회경제적 불만이 ‘진보적인’ 방식으로 동원되는 데 실패하고, 심지어는 ‘극우적인’ 운동에 의해 포획되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노회찬 역시 진보정당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많은 개인적인 정치적 실패뿐 아니라 세력 감소를 경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진보정당의 창당과 집권을 꿈꾸었지만, 그가 살아있던 시기에도 진보정당은 꾸준한 상승세를 겪기보다는 여러 차례 좌절과 위기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는 진보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스스로 변해야 하는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과 글을 남겼다.

그렇다면 그가 ‘진보의 위기’의 원인과 타개책으로 꼽은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 그는 진보 세력이 ‘정치’를 받아들이고 ‘세속화’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에게 대중성은 정치 그리고 진보와도 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이념이나 관습보다는 ‘실사구시’라고 표현한 현실주의나 실용주의라고 불릴 만한 발상들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진보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권력을 잡을 대안을 내놓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현실적 책임의 발로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진보가 무엇보다 “정치를 재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를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운동의 관성과 관념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그간의 관점을 비판하며, 정치란 “현실의 국민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얻고,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노회찬 외 2014, 179). 그러면서 그는 그가 노원병에 출마했을 때 한 당원 부부가 ‘그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 까닭은 그가 현실 정치로 세속화될까봐 계속 투사로 남아주길 바랬다’는 취지의 말을 언급하며, 그러나 그는 “진보정치가 더 세속화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단언한다(부록 <진보의 세속화> 참고).

이러한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은 그가 “탈 운동권 진보”(182)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곳에서도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또 리더십에 관한 그의 입장에서조차 흥미롭게 이어진다. 이것은 결코 사회운동이 필요 없다거나 진보정당이 그것과 연결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변혁운동’의 방식으로 존재하거나 행동하며 선민의식을 갖거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내고 결정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는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운동’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만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진보정당이 인물론을 경계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는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 중 하나로 과거 독재 체제에서 지하 활동을 했을 때 정파 리더들이 수면 아래 있었던 습성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일상 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의 피상성 또한 비판하며 “스웨덴 사민당이 각 지역에서 일상 활동을 열심히 해 지금처럼 커진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에서는 리더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리더가 아닌” 상황 속에서는 당이 커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194-200).

그가 이처럼 리더십을 중시하는 까닭은 정당, 특히 진보정당이 대중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그의 생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진보의 장점과 대중성은 오히려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노회찬이 무엇을 각기 진보의 장점과 약점으로 간주하는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이 그러한 생각을 잘 보여준다.

“헌신성, 대중적 친화력, 대중을 신뢰하는 것, 대중을 중심에 놓는 것, 약자들을 위한 정의감 등 진보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그간 진보는 관성이나 낡은 질서에 갇혀 있으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고, 설득시키고, 힘을 만드는 데 두각을 나타내왔다. 그런 능력을 최대한 강화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상주의적이고, 비대중적이고, 자기 고집으로 분열하기 쉬운 진보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공연하게 벌여야 한다. 이상과 현실은 늘 갈등을 빚게 마련이기 때문에 진보의 이상주의적 취향은 현실에서 방해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중적 확산이 힘들어지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노회찬 외 2014, 208. 강조는 필자.)

흥미로운 것은 그가 ‘대중성’에 관한 언급을 진보의 장점과 약점으로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중에 관한 성격은 진보의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회찬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진보가 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대중과 약자를 대변하며, 그 와중에 기존의 상상력과 한계에 갇히지 않으려고 하고, 대중의 힘을 믿고 설득을 멈추지 않으며, 대중에 끝없이 다가가려 하는 특징을 극대화했을 때. 반면 다음과 같을 때 진보를 힘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이상주의적 측면들이 고집이 되고 비대중적이 될 때, 관성적 한계에 갇히면서 설득을 포기하고 확산에 힘을 들이지 않을 때. 만약 오늘날 진보가 대중과의 상호 신뢰, 즉 대중에 대한 지지와 믿음을 모두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 양상이 어떠하며 그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볼 수 있어야 할지 모른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라며, “민주화라는 게 대단한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니”며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걸 만들어주는 것이 민주화”라고도 언급한다(274). 이것은 순간적인 인기만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가 가진 대중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당위에 대한 굳은 고백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정치란 다양한 모습을 한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 또 그러한 대중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소망하는 정치란 소금으로 머무르기보다는, 비록 그 길이 굴곡질지라도 아래로 폭넓게 흘러 바다가 되는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구절 역시 그의 대중성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가 방송 토론뿐 아니라 팟캐스트,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활용에 있어서 매우 활발했던 까닭 역시 추론해 볼 수 있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 같은 거죠. 중국 혁명에서 모택동의 대중 노선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는 오늘의 진보 정치에도 요구되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물고기가 물에 적응해야 되느냐, 아니면 물이 물고기에 적응해야 되느냐, 답은 분명한 것이죠. 물고기가 물에 적응해야 된다. 당이 대중의 현실에 적응해야지요. 그럴 때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노회찬 외 2010, 366)

이처럼 그의 말과 글에서 대중이나 현실이라는 말은 매우 반복해서 등장한다. “흔히 좌파하면 이상 이러는데, 실제 성공한 좌파들을 보면 그지없이 대중적이고 현실적이었다”는 지적(노회찬

외 2010, 135)부터 시작해서, 진보가 “그동안의 관념성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을 활용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문에(180), 진보의 기본 원리란 “실사구시”이며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말까지. 그는 그 까닭에 대해 “진보가 이상은 있지만 실사구시가 없다면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다(184). 또 그는 흔히 보수가 성장을 진보가 분배만을 강조한다는 관념에도 도전하며, 진보가 성장전략을 이야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노회찬 외 2014, 232-233). 그는 독일에서 정부가 ‘환경사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든 예시를 들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역설한다. 물론 그는 삶의 질이나 평등이 배제된 외면적 성장만 강조하는 것에는 비판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장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우리[진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던진 바 있다.

다만 그에게 ‘현실적’이란 것의 의미는, 의미 있는 개혁을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대중화시켜야 한다는 뜻이지 ‘실용’이 개혁을 포기하는 명분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에게 “실리와 실용은 의미 있는 가치”였지만, “자유, 민주주의, 평등 혹은 개혁 등과는 다른 차원, 더 낮은 차원의 개념”이었다(노회찬 2019b, 137).⁴⁾

노회찬이 남긴 진보의 세속화와 대중성에 대한 언급들은 그를 단순히 한 명의 진보주의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독자적 의미와 대중과의 연루를 매우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시에 특유하게 의미 있는 ‘민주주의자’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노회찬의 이러한 말과 글은 진보의 위기에 관한 손쉬운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가 대중적인 힘과 지지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자극이 될 수도 있다.

결론을 대신해

오늘날 민주주의의 어두운 모습들 속에 적잖은 이들에게 진보보다는 퇴보가, 낙관보다는 비관이 우세한 관점으로 보이기도 한다. 2014년 진행되었던 인터뷰에서 노회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마지막으로 던져졌다. “앞으로 진보의 미래를 낙관하나?” 그는 답한다. “낙관한다.” 그 까닭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끝을 맺는다.

4) 여기서 대중성과 현실성에 대한 말과 글은 주로 2010년 이후에 쓰여졌다. 반면 ‘인류의 역사는 회계장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실용’의 한계에 관한 언급은 2005년에 쓰여졌다(노회찬 2014, 137). 두 언급 사이의 간극을 시간과 정치적 상황에 따른 차이로 볼지, 아니면 서로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어쩌면 2013년에 말해진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세상은 주관할 땡기듯이 금방 답이 떨어지는, 계산에 의해서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옳은 것이 끝내는 이긴다는 믿음, 확신, 그리고 대가를 한없이 치르더라도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 그런 순수함이 늘 이기지 못했지만 끝내는 이겨왔다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마저 무력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정말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노회찬 2019, 117)

“두 가지에서다. 하나는 이 사회가 점점 더 진보를 필요로 하는 사회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의 우월성뿐만이 아니라 계속 스스로를 감시하고 파괴하고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혁신하는 진보의 속성 때문이다. 진보는 때로 길을 잃어 방황하고 우를 범하거나 실책을 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고유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때문에 진보의 미래를 낙관한다.”(노회찬 외 2014, 289)

시간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낙관이 실현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이를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는 그가 제시하는 낙관의 이유를, 거꾸로 낙관의 조건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다.⁵⁾ 진보의 미래를 언제 낙관할 수 있는가? 진보의 미래를 꿈꾸는 이들이 이 사회의 절박한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그 필요에 부응하고자 할 때, 그리고 스스로를 파괴적으로 혁신하며 그 길을 바로 잡고자 할 때.

노회찬의 사상과 삶의 궤적이란 진보란 어떠한가? 라는 기존의 관습에 갇혀 있기보다는,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는 꿈을 잃지 않되 주어진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목표를 위해 변화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혁신의 연속이었다고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를 다르게 인식하려고 했으며, 다른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했던 그의 진단과 대안 그리고 태도에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그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는 앞서 지적한 위기와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언급된 세 개의 민주주의 위기의 양상들은 서로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정치적 대표와 대안들의 협소한 구조 속에서, 진보가 불평등 문제를 동원하지 못할 때 그 대중적 불만들은 쉽게 극우적이거나 극우-연합적인 포퓰리즘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그러한 운동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나 대안의 조직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진보의 위기 그 자체를 현상한다. 근래 한국의 풍경으로 번역해 본다면, 젊은 세대의 고용과 주거 등에 대한 불안은 평등을 향해 정치화되기보다는 이른바 ‘운동권 세대’ 등에 대한 불만과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멸시로 연결되거나, 의미 있는 대항 담론조차 잘 조직되기 어려운 현실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이러한 필요와 불만을 어떻게 평등을 위한 동원으로 구성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들이 요청된다. 일례로 탄핵 광장에 나온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는 점과 함께, 젊은 세대에게 있어 “지역별 주거, 교통, 교육 등 삶과 맞닿은 실질적인 불평등 해소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여 정치적 갈등을 동원”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대중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하게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주거, 돌봄, 기후, 고용이라는 청년들의 일상 의제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언어로 정치화하고, 이들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이들을 대표할 대중적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은 상당

5) 흥미로운 것은 노회찬이 『논어』의 한 구절에 대해 이러한 방식의 해석을 즐겨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마흔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오십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는 잘 알려진 구절에 대해, 그의 해석이란 이는 공자 같은 성인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우리는 반대로 40대에는 유혹을 조심해야 하며 50대에도 인생의 뜻을 모르니 더욱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이광호 2023, 211). 이러한 발상은 당위나 꿈이 그 자체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늘 긴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고 그 당위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 노력과 수단이 필요하다는 그의 태도를 담고 있을지 모른다.

한 의미를 갖는다(정유현 2026).

그리고 이 과정이 단순히 지금까지의 관성적인 언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관계나 주거 및 노동 등을 비롯해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삶의 형태와 경험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 “분배의 새로운 원칙을 제안”하고, “그러한 분배가 왜 사회적으로 정당한가를 설득하는 (...) 정치”라는 점도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정보영 2026). 그 과정이 유효하게 반복되어야만, 정치가 수 세적이거나 시시포스적인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공기를 바꾸는 일’(이광호 2023, 461)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8년 노원에 출마한 노회찬의 말은 민주주의의 의미가 어떤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은유를 보여준다. “이번 선거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우리 유권자가, 즉 내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누구를 당선자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노회찬 2019, 67-68) 민주주의란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 그 이야기에 대한 충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부록: 민주주의에 관한 노회찬의 주요한 말과 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과 제7공화국>

“87년 6월 항쟁이라는 하나의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 8, 9월의 노동자 투쟁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반공 규율사회를 극복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자유주의적 에토스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도 분명 존재했던 것이죠.

이 두 개의 흐름은 지배세력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자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6월 항쟁의 성과는 양김으로 수렴되면서 정권교체를 거쳐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개혁과 진보를 표방했던 이른바 민주화운동 세력이 대거 제도정치권으로 진입하게 되고 7, 8, 9월 노동자 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투쟁의 현장에 남겨지거나 그 이후로도 수배되거나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이 시대의 과제라고 외쳤던 자유주의 개혁세력들에게 6월 항쟁은 ‘성공한 항쟁’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청와대에 들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성공을 자축했고요. 반공규율 사회가 남겨놓은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정치제도를 개혁하려고 했던 이들의 역할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들의 역할은 딱 거기서 멈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가 국가독점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 시장체제로 급격히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유주의적 에토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배달호 씨의 분신자살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민주화된 시대에...’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이른바 386정치인들이 누구도 이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는데,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유연화 요구 아래 정리해고가 본격화되었던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 정부 측 중재단 단장이 노무현 씨였으며,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리해고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었죠. 직접적인 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마치 프랑스 혁명 이후 1871년 빠리코뮌이 부르주아의 지지를 받는 정부군에 의해 짓밟히듯이, 6월 항쟁의 주역들은 7, 8, 9월 노동자 투쟁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를 분리시키고 또 나중 신자유주의 추진세력이 되는 길을 선택해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보의 미성숙을 넘어서’ (노회찬 외 2010, 405-406)

노회찬이 보는 한국의 1987년 체제란 미완의 것이었다. 그는 1987년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요구가 함께 분출했지만, 전자만이 유의미하게 실현되었다고 보고 후자를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

”노무현 대통령 5년, 김대중 대통령 5년 지난 10년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이비 개혁세력으로는 보수 수구 세력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죽은 박정희를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한나라당 사람들이 무덤 파서 박정희 시신을 파내고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 보십시오. 그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10년 전만 해도 감히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을 꿈이라도 꾸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용납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사이비 개혁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면서 우리 국민들이 거꾸로 돌아선 것입니다 (...) 그래도 한나라당 집권은 막아야 한다.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열린우리당 민주당 통합시켜서 해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무엇을 증명해줬습니까 범여권 한나라당 확대 강화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미련도 가질 수 없습니다. 10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두 배로 늘어나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10명중에 6명이 이미 비정규직인 이 현실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 세 명중 한명이 정상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해 불안정한, 전망이 어두운 자영업에 몰매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한편으로는 백만장자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2005, 2006년 연거푸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이 나라에서, 그래서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비율이 네 번째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심판해야 합니까?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87년 개헌 이후 4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집권정당이 4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얼굴은 바뀌었지만 사회 양극화는 차곡차곡 격차를 벌여왔습니다. 집권당은 바뀌었지만 비정규직은 한시도 쉬지 않고 양산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외양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모두 정책과 이념이 같았기 때문에 사회양극화는, 동일한 현상이 심화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6공화국 해체해야 합니다. 대통령 자리 하나 바뀌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당 하나 갈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 제가 제7공화국을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헌정사적 변화가 있었지만 전두환 독재정권 하나 탄생하는 것 가지고도 4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5.16 쿠데타 일으켜 3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민주적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제2공화국 밖에 없습니다. (...)

제7공화국은 그 테제가 발표되었습시다만,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최대로 보장하고 있는 마지막 사회는 아닙

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대장정에 있어서 첫 집권으로 5년 안에 반드시 실현할 것을 테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철학, 전혀 새로운 사상, 전혀 새로운 근본노선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 의료, 주택.. 이제 더 이상 상품으로서 거래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교육, 의료, 주택, 공공재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 특히 제7공화국은 제1공화국 헌법에 등장해서나 선언만 되었을 뿐 전혀 실현되지 못한 이익균점권을 과감하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임금인상만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복지를 채워나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경쟁력에 따라서 그 재정적 결과는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노동자들이 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특정 기업에 있는 특정 노동자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초기업적으로 합리적으로 균점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와 함께 이익균점권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노회찬 후보 선대위 출범 연설 (2007년 민주노동당 당대표 선거) (노회찬아카이브 2007)

노회찬은 진보정당이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러한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2007년 민주노동당 당대표 선거에서 제7공화국 구상을 발표했고, 이는 교육과 의료 및 주택 등의 공공성에 대한 강조와 초기업적 이익균점 등을 주요하게 포함한 사민주의적 구상이었다.

<대안 야당>

“4.15총선이 끝나면 한나라당은 제3공화국 이래 처음으로 원내 제1당 자리를 내놓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수구적인 한나라당에서 온건보수적인 열린우리당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창당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의 ‘개혁’은 성공할 것도 없지만 낡은 기득권에 안존하는 정치세력과 자신의 차별화에 성공함으로써 ‘개혁 이미지’를 획득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자리잡는 데는 성공하였다. 이제 3김 시대 이후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의 대표성은 영남 지역주의에 기반한 수구세력에서 탈지역주의의 온건개혁세력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류로 등장하는 온건보수세력을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은 진보정치세력의 몫이 되어야 한다.

사멸해가는 낡은 기득권 수구세력은 더 이상 야당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다. 탄핵정국은 이를 용변으로 입증해주는 사례이다.”

- ‘사멸해가는 낡은 기득권 수구세력은 더 이상 야당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중 (노회찬 2004, 246)

“오늘 이 땅의 진정한 위기는 반민주, 반서민 정권인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대신해,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이 나라 대다수 서민들이 지지할 대안 야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1야당인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반민주, 반서민 행태에도 불구하고, 대안 야당이 되지 못하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며,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사회문제인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시킨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은 누가 만든 법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통과시키려 안달이 난 한미 FTA는 어느 정권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은행을 재벌에게 안겨 줄 금산 분리 완화는 어느 당이 먼저 발의한 법이며, 지난해 말 부자 감세안에 대한 민주당의 합의는 무엇을 말해 줍니까?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대안 야당은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서민에게 복지를 실현해 줄 야당입니다.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고, 국민에게 은행을 돌려줄 야당입니다. 막대한 사교육 격차로 부와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교육 기회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장해 줄 야당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의 확산을 실현할 야당입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대안 야당은 이제 진보 정치에서 나와야 합니다.

- ‘동물의 왕국, 인간의 왕국’(2009년 진보신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문) 중 (노회찬 2019, 70-71)

노회찬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진보정당의 집권과 함께 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한 목표 중 하나는 진보정당이 진정한 ‘대안 야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그는 넓고 ‘반민주적’이며 ‘수구적인’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든, 온건보수세력이 나 온건개혁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든, 진보정당이 이들과 실질적으로 경쟁하면서 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안 야당’이 되기를 꿈꾸고 나아가고자 했으며 그것이 더 나은 정치의 풍경을 자아내리라 믿었다.

<진보의 세속화>

“[보통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적 지지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치를 재인식하는 것이다. 현실 정치는 현실의 국민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얻고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를 자기 운동의 관성과 관념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 정치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진보신당에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다. 서울 노원병에 처음 출마했을 때 한 당원 부부는 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한다. 내가 당선되면 현실 정치로 자꾸 세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선되지 않고 계속 투사로 남아주길 바랐다는 것이다. (웃음) 하지만 나는 진보정치가 더 세속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 현실화되어야 하고, 더 냉정하게 대중에게 평가받고, 평가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한국의 진보는 (...) 운동이 정치의 우위에 있거나 운동이 정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심지어 ‘정치는 나쁜 것이다.’라는 반정치적 측면까지 있다. 정치를 안 할 사람이라고 하면 도덕적 우위를 부여한다. 정치를 건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굉장히 세속화된 세력들이다. 패배하면 당장 큰일 난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 별짓을 다 한다. 하지만 여기는 꼭 그렇지 않다.

(...) [진보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정치적인수록 진보성을 잃는다거나 두 가지가 양립하기 힘들다고 보는 경향들이 더 많았다. 내가 세속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정치는 엄연한 하나의 현실이고, 진보주의자의 기본 덕목은 실사구시다.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 위에서 현실을 바꾸는 게 진보주의자의 덕목이라면 이것은 양립해야 한다. 진보의 가치는 정치화되는 만큼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신앙과 정치는 다르다. 신앙은 자기를 간직하면 되지만, 정치는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 2014년 인터뷰 중 (노회찬 2014, 179-182, 184)

노회찬은 진보가 정치를 불결하거나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에 대해, 오히려 진보가 더욱 세속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을 진보의 가치에 따라 바꾸고자 한다면, 그 진보의 가치란 그것이 정치화되는만큼 실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진보’가 홀로 떨어져서 신념을 지키는 일에서 그치지 않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했고, 이것이 그를 한 명의 진보 정치인일 뿐 아니라 특징적인 ‘민주주의자’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름 없는 이들, 얼굴 없는 이들을 위한 정치>

“실로 이 나라는 이름 없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지켜져왔고 또 이름 없는 많은 분들의 땀방울로 성장해왔다.

첫 날 첫걸음을 무명용사탑으로 정한 것은 이름 있는 사람 앞에 줄 서는 정치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의 뜻이다. 이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한 다리가 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다.”

— ‘첫 날 첫걸음을 무명용사탑으로 정한 뜻은’ 중 (노회찬 2019b, 327-328)

“그 빌딩이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그 고압선 첩탑 위에 올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3명씩 죽어 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용산에서 몇 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 남일당 건물에서 사라져 간 다섯 분도 투명 인간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아홉시 뉴스도 보지 못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시민을 모르고 심상정을 모르고 이 노회찬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그 누구 탓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진보정의당,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수많은 투명인간들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일말의 의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강물은 아래로 흘러갈수록,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중 정당은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실현될 것입니다. (...) 우리가 바라는 모든 투명인간들의 당으로 이 진보정의당을 거듭 세우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 넣겠습니다.”

—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 (2012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수락연설문) 중 (노회찬 2019, 104-105)

노회찬에게 의미 있는 정치란,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과 얼굴 없는 수많은 이들을 대표하는 것

이었다. 그에게 대한민국은 이들의 희생으로 지켜졌고, 이들의 땀방울로 성장한 것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여온”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름도 얼굴도 없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투명인간으로 존재하고 있기도 했다. 그는 이들의 ‘다리’가 되겠다고, 또 이들이 냄새 맡을 수 있는 장소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노회찬이 이들을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호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김윤철 2021, 2498)은 주요한 한계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예컨대 미국 뉴욕의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의 한편으로 비슷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나는 시장 승리 연설과 대비된다.⁶⁾ 우리는 이것을 그가 그 자신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체들을 성공적으로 동원하고 대표하며, 이를 통해 승리한 경험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한계와 과제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승. 2023. 『민주주의 위기론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한국 위기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가데이터처. 2026. 「2026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김윤철. 2021. 「노동존중의 정치와 노회찬의 6411 정신」. 『인문사회 21』, 12(2), 2485 - 2500.
- 노회찬. 2004. 『힘내라 진달래』. 사회평론.
- 노회찬 외. 2010. 『진보의 재탄생』. 꾸리에북스.
- 노회찬 외. 2014.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비아북.
- 노회찬. 2019. 『노회찬, 함께 꾸는 꿈』. 후마니타스.
- 노회찬. 2019b. 『노회찬의 진심』. 사회평론.
- 노회찬아카이브. 2007. 「노회찬후보연설 1」. <https://www.youtube.com/watch?v=sdQPk8w5wT0>.
- 레비츠키 외. 2018.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박세연 옮김. 어크로스.
- 신진옥. 2018.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의진자 운동, 1987-2017: 포스트권위주의와 포스트민주주의 문제의동시성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55-100.
- 신진옥 외. 2025. 『광장 이후』. 문학동네.
- 아제모글루, 대런 & 존슨, 사이먼. 2023. 『권력과 진보』. 김승진 옮김. 생각의힘.
- 이광호. 2023. 『노회찬 평전』. 사회평론.

6) <https://time.com/7331243/watch-zohran-mamdani-victory-speech/>

정보영. 2026. 「우리에게 남은 과제. 『노회찬 8주기 추모 심포지엄 자료집』. 노회찬재단.
 정유현. 2026. 「토론문. 『노회찬 8주기 추모 심포지엄 자료집』. 노회찬재단.
 진보정당추진위. 1999. 「4대 정치악법 뜯어고치자」. 『진보정치』 창간준비 5호, 11.
 통계청. 2024.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Baccini et al. 2022. “Trade liberalization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76(1), 70–104.

Berman, S. 2022. “How Democracy Can Win”.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europe/how-democracy-can-win-far-right-sheri-berman>

Lührmann, A., & Lindberg, S. I. 2019. “A Third Wave of Autocratization Is Here: What Is New About It?”. *Democratization*, 26(7), 1095–1113.

Rodrik, D. 2023. “On Productivism.” *The London Consensus* (2023): 77.